

2026 주요업무보고

2026. 2.

재무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4팀 237명/227명 (정/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 3명, 38세금징수과 6명)

기능

과 별	주요 업무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인건비(일반회계) 운영,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교환 총괄, 시유재산 총조사 및 결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난연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6,620,293	26,166,313	453,980	1.7
시 세	26,354,319	24,912,528	1,441,791	5.8
세 외 수 입	264,610	323,461	△58,851	△18.2
보 조 금	1,364	1,295	69	5.3
보 전 수 입 등	-	929,029	△929,029	순감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479,928	3,290,235	189,693	5.8
인 력 운 영 비 (통 합 편 성)	944,095	909,047	35,048	3.9
기 본 경 비	858	866	△8	△0.9
재 무 활 동	36	-	36	순증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36	-	36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	-	-	-
		(0.196)	(△0.196)	(순감)
사 업 비	2,534,938	2,380,321	154,617	6.5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670	1,600	70	4.4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1,915	22,968	△1,053	△4.6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1	42	△1	△2.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772	1,622	150	9.2
시세입 목표달성	10,838	5,709	5,129	89.8
조세정의 실현	5,190	5,504	△314	△5.7
타 기관 지원	2,493,513	2,342,877	150,636	6.4
자치구 재정보전금	1,938,305	1,805,421	132,884	7.4
시세 징수교부금	555,208	535,026	20,182	3.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430	△2,430	순감

재 산 현 황 (市)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호수	면 적(천㎡)
합 계	58,423	109,338(100.0%)	77,065	13,385(100.0%)
행 정 재 산	56,483	108,075(98.8%)	6,072	5,737(42.9%)
일 반 재 산	1,940	1,263(1.2%)	70,993	7,648(57.1%)

II . 정책목표 및 방향

적극적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미래특별시 서울 초석 마련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

1. 미래특별시와 함께할 최적의 시금고 선정
2.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 합리적인 세제개선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세입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1. 2026회계연도 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징수 강화
2. 체계적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시민 눈높이
계약행정 실현

1.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
2. 적정공사비 반영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시유재산 가치 및
관리효율 제고

1. 체계적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공유재산 운용 효율성 제고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납세자
서비스 강화

1. 시민 중심의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2. 스마트폰 세무 정보 알림으로 납세 편의 강화

정
책
과
제

실
천
과
제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2. 세입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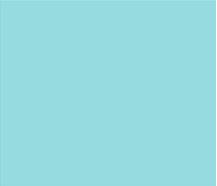
3. 시민 눈높이 계약행정 실현

4. 시유재산 가치 및 관리효율 제고

5. 납세자 서비스 강화



1.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1. 미래특별시와 함께할 최적의 시금고 선정

2.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 합리적인 세제개선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1-1 미래특별시와 함께할 최적의 시금고 선정

- ◆ 현 시금고 약정만료('26. 12. 31.)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시금고 선정

□ 선정개요

- 운영기간 : '27. 1. 1. ~ '30. 12. 31.(4년)
- 금고운영 : 1금고 (일반·특별회계), 2금고 (기금)
- 선정절차 : ① 지정계획 수립 ⇒ ② 지정계획 공고 ⇒ ③ 제안서 접수 ⇒ ④ 금고지정 심의회 ⇒ ⑤ 약정 체결

현 시금고 운영 현황

- ◆ 약정기간 : '23. 1. 1. ~ '26. 12. 31.(4년)
- ◆ 금고은행 : 1금고(신한은행), 2금고(신한은행)
- ◆ 출 연 금 : 총 2,664억원(1금고 2,511억원, 2금고 153억원)

□ 추진계획

- 최적의 시금고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 '지역사회 기여' 항목 평가방법 개선 및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평가배점 조정 등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25.12.10.)사항 반영 개정조례안 제출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마련 제출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금융·전산·회계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예비위원 추천 → 민간전문가 과반수 위촉
 -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12명) : 위원장(행정1부시장), 시의원(행자위), 민간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 * 외부 추천 예비 심의위원(4배수 이상) 중 경찰관 입회 하에 감사공무원의 추천 순서에 따라 위원 위촉
-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한 평가 절차 진행**
 - 심사 전과정 정보 유출 차단 및 심사자료 심의위원 앞에서 당일 개봉
 - 당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의결 후 평가 등

□ 추진일정

-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 : '26. 3월
- 지정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등 선정절차 진행 : '26. 4~5월

1-2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 ◆ 2025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0개 기관 293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20개)
- 결산규모 : 62조 6,996억 원(세출예산 53조 629억원, 기금 9조 6,367억원)
- 작성 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5회계연도 결산	288,175	30,000	228,175	15,000	15,000

□ 추진일정

-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작성 및 보고 : '26. 3. 20.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35일간, 예정) : '26. 4. 7.~5. 11.
 - 제33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원 3명 포함 15명~20명)
 - ※ 결산검사 의견 건수 : '25년 84건, '24년 72건, '23년 74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26. 5. 29.까지
 - 제출안건(3건)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36회 정례회) : '26. 6. 10.~6. 26.
- 결산결과 고시 및 시민참여예산 결산 실시 : '26. 7. 1.~12. 31.

1-3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와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통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 및 재정 분권 실현 도모

□ 추진배경

- 중앙정부 중심 세입 구조(국세 : 지방세, 75% : 25%)로 지방재정 어려움 가중
 - 중앙·지방정부 재정사용액은 40.6% : 59.4%인데 반해 지방세는 재산 중심 과세 구조로 부동산 경기·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 재정 운영 한계
 - OECD 주요 국가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 ('20년 기준) 일본 59.5 : 40.5, 미국 52.2 : 47.8, 독일 46.1 : 53.9, 프랑스 70.4 : 29.6
- 국정과제 「국세-지방세 비율 7 : 3 수준 상향」에 단계적·체계적 대응 필요
 - (정부) 부가가치세 이양 비율을 25.3% → 45%(19.7%P↑) 우선 검토 중

□ 추진계획

- (단기) 국세:지방세 비율 7 : 3 달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이양 확대
 - 부가가치세의 24.7%P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 (현행 25.3% → 50%)
 - 정부의 이양 논의 과정에 市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적시 대응
 - ▶ 「재정분권TF」 동향 파악 및 우호적 민간위원과 협력 통해 시 의견 반영
 - ▶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전문가 칼럼 활용 등을 통해 적극 대응
- (장기) 법인세의 지방소득세 이양(30%P)을 통해 6 : 4 목표 달성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10 : 1 구조 → 7 : 4로 조정 지속 건의

< 국세의 지방세 이양 효과 > - '24년 결산 기준

구 분	현행 세입액	7 : 3(단기)	6 : 4(장기)
전 국	112조	141조(29조↑)	193조(52조↑)
서울시	25조	28.7조(3.7조↑)	46.9조(18.2조↑)

□ 추진 일정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속 건의 및 적시 대응 : '26. 2월 ~

2. 세입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1. 2026회계연도 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징수 강화

2. 체계적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2-1 2026회계연도 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징수 강화

- ◆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 세원 발굴 등 적극적 세입 징수 및 체납관리 효율화로 차질없는 '26년 시세 징수목표 달성

1 시세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 '26년 징수목표 : **26조 3,543억 원** (전년대비 1조 4,418억 원↑)

(단위 : 억 원, %)

세목	구분	'26년 목표(A)	'25년		'25년 대비 증감			
			예산(B)	결산전망(C)	예산(A-B)	%	결산전망(A-C)	%
합	계	263,543	249,125	281,297	14,418	(5.8)	△17,754	(△6.3)
취득세		61,955	56,005	79,873	5,950	(10.6)	△17,918	(△22.4)
자동차세		11,172	11,166	10,443	6	(0.1)	729	(7.0)
지방소비세		28,075	29,092	27,647	△1,017	(△3.5)	428	(1.5)
지방소득세		83,792	78,331	85,662	5,461	(7.0)	△1,870	(△2.2)
기타시세		78,549	74,531	77,672	4,018	(5.4)	877	(1.1)

□ 추진계획

-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총력 징수 체제 구축 및 운영**
 - 세목별·월별 세입 실적 분석 및 자치구별 특성 고려, 세입 목표 부여(2월)
 - 위임징수 세목 목표 달성을 위한 세목별·분기별 자치구 대면 점검 강화
- **세입 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구 합동 대책 회의 개최**
 -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 수립(2월)
 - 추진실적 점검 및 자치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상·하반기 합동 대책 회의 개최
- **시·구 협업 강화 및 세입 우수사례(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목별 담당 워크숍** 개최(3월~11월)
 - 시·구 유기적인 협력 징수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상반기)
- **세목별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을 통한 세입 목표 초과 달성**
 - (신고납부 세목) 납세자신고 적정성 여부, 감면 해당 여부 등 철저히 자료 확인
 - (부과고지 세목) 정확한 과세자료(각종 지수, 가산율 등) 정비 및 송달로 징수율 제고

□ 추진일정

- 2026년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 징수대책회의 개최 : '26. 2. 27.(금)
-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총 8회) : '26. 3월 ~ 11월

2**체납업무 효율성과 징수역량 강화로 징수목표 2,296억원 달성**

□ '26년 체납시세 징수목표 : 2,296억 원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조세 정의 구현**

-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 분석 및 포착으로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 과거 고액자산가 등의 재산 편법증여 여부, 가족 및 타인명의 사업장 면밀 조사
 - 사해행위취소, 상속대위등기,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등 민사소송 적극 제기
 -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현장조사 및 체계적 집중 관리로 징수 총력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로 강도 높은 현장 징수 전개
 - 금융자산, 공탁금,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市에서 일괄조회 후 자치구 제공
 - 유관기관 협업(시·구·경찰청·도로공사 등)으로 체납차량 단속 강화(연2회)
- 뉴미디어(유튜브) 및 언론 동행취재를 통한 성실 납세 문화 확산
 - “세금은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메시지를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
 - 언론 동행취재, 기획기사 발굴, 릴스, 숏폼 제공 등 체납징수활동 홍보

□ **체납 업무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체납 징수 실행력 강화**

-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인식·DB화로 현장 징수 시간 확보
- 부동산 등기 권리관계 분석 기능을 개발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업무 효율성 증대
- (향후) 체납 정보를 학습자원화하여 AI·데이터 기반 징수 체계 단계적 구축 : '27년~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 체납 시세 징수	693,540	173,385	173,385	173,385	173,385

작성 자

세무과장 : 신애선 ☎2133-3380 세입총괄팀장 : 권선미 ☎3382 담당: 한경숙/정주영 ☎3387
 38세금징수과장 : 오세우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조수정 ☎3452 담당: 김경희 ☎3453

2-2 체계적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 확대 및 공평과세 실현

- ◆ 자치구와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밀 자료분석에 기초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 목표 달성해 세입증대 기여

□ '26년 세원 발굴 목표 : 950억 원(전년대비 100억 원↑)

- 서울시 : 550억 원('25년) → 600억 원('26년), 50억 원 ↑
- 자치구 : 300억 원('25년) → 350억 원('26년), 50억 원 ↑

□ 추진계획

- 자치구와 협력 점검체계 구축으로 과세 누락 최소화
 - 전 자치구 2년 주기 순환 점검('26년 12개 구)으로 위임세목 부과 적정성 검증
 - 비과세·감면 적정성, 대도시 법인 중과세 집중 점검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 市 직접 법인 세무조사로 철저한 세원 관리
 -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자 市 직접 세무조사
 - 정밀한 사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조사를 활성화해 효율 극대화
- 시·구 합동 세무조사 및 조사기법 공유를 통한 실무 역량 상향 평준화
 - 시·구 합동 세무조사 확대 및 이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찾아가는 맞춤형 세원발굴 컨설팅(자치구별 현황에 맞는 조사교육) 실시
- 시세 불복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세입 손실 차단
 - 조세전문 법률대리인과 불복 전담 직원 협업체계 구축으로 승소율 제고

□ 추진일정

- 시·자치구 합동 세원발굴 실시 : '26. 2월 ~ 4월
-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 '26. 5월 ~ 12월

작성 자

세무과장 : 신애선 ☎2133-3380 세무조사팀장 : 이용훈 ☎3420 담당 : 김태화 ☎3426
세원관리팀장 : 차규현 ☎3421 담당 : 한경덕 ☎3424



3. 시민 눈높이 계약행정 실현



1.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

2. 적정공사비 반영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3-1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

◆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내부 감시 절차를 강화하여 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 제도 운영

□ 추진계획

- 계약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 발주 강화('26.1월~)
 - 특정 분야 1인 수의 제한 →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 '26년 사업 대상 : 폐기물처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선정기준 : ① 안정적 품질 확보 용이 ②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심화 해소
- 부적절한 수의계약 원천 차단 모니터링 지속 추진(상시)
 -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후 규정 준수 촉구 및 위반 사유서 징구
 -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금지 기준 : 실·국·본부 연간 5회, 市 전체 연간 10회
 - 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한 과다 증액 악용 사례 상시 점검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 교육 및 계약 매뉴얼 제작
 - '26년 제도 개선 사항 및 사례 중심 계약 실무 강의를 통한 계약 실무 교육('26.2월, 8월)
 - 계약 실무 초보자 대상 계약 업무절차 및 지방계약 규정 안내서 배포('26.6월)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 확보(매월)
 - 변호사, 교수, 건설기술인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 이상 공사 및 20억 이상 용역·물품의 발주 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심의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6,960	6,740	6,740	6,740	6,740

□ 추진일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 발주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 모니터링 : '26. 1월 ~ 12월

작성자 재무과장 : 최선혜 ☎2133-3211 계약총괄팀장 : 심동길 ☎3222 담당 : 고미경/김대현 ☎3223/3265

3-2 **적정공사비 반영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교통혼잡 등 도심지 여건을 반영하는 계약심사로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고 신속한 심사로 조기 발주 및 경제활력 제고 지원

□ **추진계획**

- 예산 누수 방지와 공사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적정공사비 심사 추진**
 - 심사 전력이 없는 신규사업 등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로 원가산정의 적정성 제고
 - ※ 산정기준이 없는 공종에 대해 서울형 품셈 신규 개발(총 9개 : 토목3, 건축1, 조경1, 기계2, 전기2)
 - 도심지·위험환경 작업 등 표준품셈(국토부)의 **할증 사항** 및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증액 반영** 심사
 - ※ 규제철폐 과제('25년)로 도심지 할증·법정경비 반영 심사 추진
- 발주부서 사업이 **적기 발주될 수 있도록 효율적 심사**
 - 집중심사기간 운영(상반기 4일 이내), 유사사업 통합심사, 사전검토제로 기간 단축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로 심사 실익이 낮은 원가계산 우수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 등 한시적 심사 제외
-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서울계약마당 2.0** 추진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입찰·계약 **가이드 콘텐츠 제공 및 사용자 중심 검색 기능 강화**
 - * 계약 금액별 필터링과 인기 키워드 기반(인쇄 등) 원클릭 검색으로 맞춤형 검색 고도화
 - 기업이 알고 싶어하는 계약 사례 중심의 **최근 10년간 시·도의 유권해석** 제공
 -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계약 데이터 기반 **발주기관·시기별 통계 시각화 정보** 제공
 -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심사 운영	40,700	8,925	16,925	7,925	6,925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387,779	96,545	96,545	96,545	98,144

□ **추진일정**

- 도심지 여건 등을 반영하는 적정공사비 계약심사 추진 : 연 중
- 서울계약마당 2.0 서비스 제공 : '26. 6월~

작성 자 재무과장 : 최선혜 ☎2133-3211 계약총괄팀장 : 심동길 ☎3222 담당 : 박지은 ☎3226
 계약심사과장 : 한건수 ☎2133-3300 심사총괄팀장 : 정금자 ☎3302 담당 : 김희정 ☎3303

4. 사유재산 가치 및 관리효율 제고

1. 체계적 사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공유재산 운용 효율성 제고

3. 사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4-1 체계적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 ◆ 정밀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와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일괄 교환으로 시책사업 추진 지원

□ 추진계획

-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권역별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사업대상 : 도심권(종로·중구·용산) 총 8,823건(토지 8,165필지, 건물 658동)
 - ※ ('23)동북권+서대문 → ('24)동남권 → ('25)서남권 → ('26)도심권 → ('27)시계외
 - 주요내용 :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조치 내실화
 - (매뉴얼 고도화) 시유재산 매뉴얼 제작 및 실태조사 연계로 담당자 편의성 제고
 - (교육강화)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연 1회→반기별 1회)
 - (과년도 미조치 재산에 대한 정비 지원) 미조치 재산에 대한 조치방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부상 오류 등 일괄정비 가능 건은 재산총괄관이 직접 정비
 - ▶ '25년 실적 : 서남권 14,187건 조사를 통해 누락재산 247건, 무단점유재산 327건 등 발굴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추진으로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
 - 경찰관서와 재정경제부 외 정부부처 재산 등 교환대상 발굴·교환
 - ▶ 경찰청과 교환 공감대 형성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25.11~)

- 국가 점유 시유재산 : 경찰관서·운전면허시험장 등 26필지 검토
- 시 점유 국유재산 : 탄천물재생센터 등 상하수도시설, 공원 등 90필지 검토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485,042	-	-	-	485,042

□ 추진일정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26. 4월 ~ 12월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 '26. 2월 ~ 12월

작성 자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2133-3271 재산정책팀장: 이준학 ☎3272 담당:김명희 ☎3276
 재산조사팀장: 곽정순 ☎3293 담당:박동욱 ☎3296

4-2 공유재산 운용 효율성 제고

- ◆ 내실있는 공유재산 심의 운영 및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시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점검 강화
 - (공유재산심의회) 쟁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사전 검토 후 본심의에서 쟁점사항 중점 논의
 - ▶ '26년 운영계획 : 6회 실시 예정('25년 운영실적 : 5회, 총 186건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완료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화
 - ▶ 반기별 미완료 사업 원인 분석 및 지연사업 이행 촉구, 시의회 결과 보고(2차 정례회)
- 중장기 종합적 재산관리를 위한 '27~'3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26~'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제출 ('25.11.1.)
 - 내실 있는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국 단위 중기계획 수립 선행
 - ▶ 향후 취득·처분 등 계획이 있는 재산의 누락 방지를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안내
 -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500	5,500	5,500	2,750	2,750

□ 추진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연 6회) : '26. 1월 ~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사항 점검(반기별) : '26. 3월 / 9월
- '27~'3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6. 6월 ~ 10월

작 성 자 재산관리과장 : 원충희 ☎2133-3271 재산정책팀장 : 이준학 ☎3272 담당 : 박다원 ☎3428
 행정재산팀장 : 김재원 ☎3279 담당 : 최자이/이희준 ☎3281

4-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 ◆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보강 조치 실시 등 시유재산의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노후건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체계화로 안전한 시유재산 환경 조성
 -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축물(1,389개소) 중 법령상 의무점검대상 등을 제외한 담당자 자체 점검 대상에 대해 건축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시행
 - ▶ '25년 실적 : 노후 시유 건축물(1,407개) 부서 점검, 건축전문가 합동 점검(37개소)
 -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타부서에 안전점검 용역비 및 안전 수선비 지원(연 2회)
 - ▶ '25년 실적 : 안전점검 용역비 1개소(9백만원) / 안전수선비 14개소(238백만원)
- 시유재산 가치 보존 및 손실 방지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상태 관리
 - 건물, 공작물 등 전체 시유재산(83,000여건) 손해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 실시
 - ※ 가입신청 안내('25.12월) → 공제가입('26.3월) → 가입여부 조사(5~6월) → 후속조치(7월~)
 - ▶ '25년 손해보험 가입 실적 : 83,148건(100% 가입)
 - 타부서 신규 취득·증축 재산 등에 대한 공제가입비 수시 지원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246,000	6,000	120,000	120,000	-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50,000	35,000	5,000	5,000	5,000

□ 추진일정

- 노후 시유건축물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및 수선비 지원 : '26. 2월 ~ 11월
- 손해보험 가입현황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 '26. 5월 ~ 12월

작성 자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2133-3271

재산정책팀장: 이준학 ☎3272 담당:신소영 ☎3299
행정재산팀장: 김재원 ☎3279 담당:최재민 ☎3282

5. 납세자 서비스 강화

1. 시민 중심의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2. 스마트폰 세무 정보 알림으로 납세 편의 강화

5-1 시민 중심의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 ◆ 시민 밀착형 현장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체감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방향

-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운영
-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 ※ 세무상담 실적 : '25년 4,991건, 총 누적 45,035건('15~'25년)

□ 추진계획

-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 '25년 51회 ⇨ '26년 총 75회 (↑24회), 구별 최소 3회 이상
 - 자치구별 연간 수요조사(2월)로 촘촘하고 효율적 상담 운영
 - 시민 대상 「알기 쉬운 개정세법 안내서」 제작·배포
- 편리한 세무상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세무상담 코너」 개발 추진
 - 상담강화 : 현행 상담방식(전화, 대면, 팩스, 이메일) 외 온라인 상담 도입
 - 추진방안 : 「서울시 ETAX시스템」 내 온라인 세무상담 기능 신설
 - 운영방식 : (시민) 온라인 문의 ⇨ (마을세무사) 상담 코너에서 직접 답변
 - ※ 금년 중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쳐 '27. 3월 개통(예정)
- 홍보물 및 市 보유매체 등을 활용한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2월~)
 - 다중이용시설(동주민센터, 은행 등)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비치
 - 전광판 표출 및 지하철 광고,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홍보 강화
 -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30,280	15,700	5,580	4,500	4,500

□ 추진일정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 '26. 2 ~ 11월
- 온라인 「세무상담 코너」 개발 추진 : '26. 3월 ~

5-2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으로 납세편의 강화

- ◆ 납세자에 대한 공시송달 및 체납 정보제공 사실 알림을 통해 납세자 편의 및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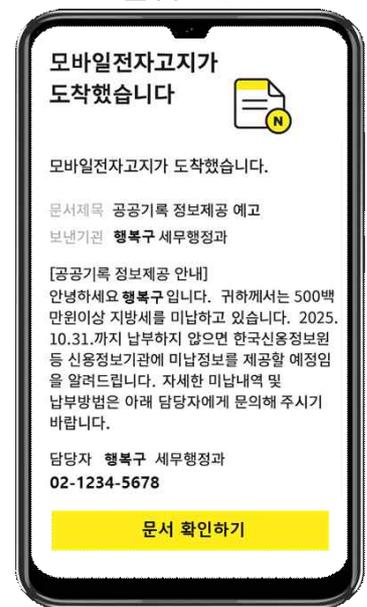
□ 추진배경

- 현행 공시송달(ETAX, 홈페이지 등)의 인지도 보완을 위해 납세자 편의 중심의 적극적인 고지 안내 필요
- 체납자(500만원 이상) 신용 불이익 등록 전·후 실효성 있는 안내 수단 강화

□ 추진계획

- (市 세무과) 공시송달·정보제공 알림 서비스 개발
- (과세기관)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체납자에게 알림을 통해 해당사실 안내 및 지방세 납부 독려
 - 공시송달 사실 안내 → 수신확인 후 체납징수
 - 체납정보 제공 전 알림발송 → 납부확인 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 → 정보제공 → 제공사실 알림발송
- (납세자) 카톡알림에서 안내사항 확인, ETAX로 연계하여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납부

<알림 예시>



□ 추진일정

- 알림업무 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 : '26. 2~3월
- 프로그램 개발·테스트 : '26. 4~7월
- 서비스 개시(체납정보제공 / 공시송달) : '26. 6월 / '26. 8월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6,620,293	26,166,313	453,980	1.7
시 세	26,354,319	24,912,528	1,441,791	5.8
세 외 수 입	264,610	323,461	△58,851	△18.2
보 조 금	1,364	1,295	69	5.3
보 전 수 입 등	-	929,029	△929,029	순감

□ 세출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	2025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3,479,927,780	3,290,234,520	189,693,260	5.8
재무과	946,138,424	911,023,159	35,115,265	3.9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55,826	576,220	△20,394	△3.5
2025 회계연도 결산	288,175	285,144	3,031	1.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52,984	213,651	39,333	18.4
시간선택제임/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90,397	60,771	29,626	48.8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6,960	27,073	△113	△0.4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8,013	80,730	△12,717	△15.8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87,779	356,751	31,028	8.7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44,095,483	909,046,671	35,048,812	3.9
기본경비	372,807	376,148	△3,341	△0.9
재산관리과	21,996,061	23,012,455	△1,016,394	△4.4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1,059,694	21,820,989	△761,295	△3.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702,712	950,106	△247,394	△26.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2,882	197,053	△44,171	△22.4
기본경비	44,415	44,307	108	0.2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36,358	-	36,358	순증

구 분	2026년	2025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계약심사과	117,067	118,997	△1,930	△1.6
계약심사 운영	40,700	41,700	△1,000	△2.4
기본경비	76,367	77,297	△930	△1.2
세제과	1,940,204,338	1,809,601,149	130,603,189	7.2
재정보전금	1,938,304,844	1,805,421,461	132,883,383	7.4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429,864	△2,429,864	순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0,490	168,010	2,480	1.5
마을세무사 운영	30,280	27,900	2,380	8.5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370,962	1,302,048	68,914	5.3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79,781	103,716	76,065	73.3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20,000	20,000	-	0.0
국고보조금 반환	-	196	△196	순감
기본경비	127,981	127,954	27	0.0
세무과	566,199,794	540,890,058	25,309,736	4.7
시세 징수교부금	555,208,200	535,025,828	20,182,372	3.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291,020	401,377	△110,357	△27.5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1,092,540	1,087,968	4,572	0.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005,644	89,397	916,247	1024.9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492,206	490,925	1,281	0.3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236,000	△106,000	△44.9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	0.0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50,000	217,000	△67,000	△30.9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274,481	1,988,463	286,018	14.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075,179	1,167,486	△92,307	△7.9
노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4,296,654	-	4,296,654	순증
기본경비	153,870	155,614	△1,744	△1.1
38세금징수과	5,272,096	5,588,702	△316,606	△5.7
고액 체납시세 징수	693,540	650,440	43,100	6.6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1,992,047	2,033,541	△41,494	△2.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2,504,533	2,819,955	△315,422	△11.2
기본경비	81,976	84,766	△2,790	△3.3

V.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37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37	16	20	1	-
	시정·처리요구사항	22	11	11	-	-
	건의사항	11	1	9	1	-
	기타(자료제출 등)	4	4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차기 금고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됨. 재무국은, 수십 조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차기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절차와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금고 선정을 준비하고 있음 - 현재 행안부 예규 개정('25.12.10.)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26.1월~3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지정 절차 진행 : '26년 상반기 - 시금고 지정 방침 수립→금고지정 공고→금융기관 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p>○ 금고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 관리 부실 시정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기부사업 실적을 정리한 자료가 부실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됨. 금고운영 평가자료 표준화, 제출 의무 강화, 사업별 실적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함 (재무과)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은행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사회공헌·기부실적) 평가자료 및 검증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6. 3월 중 *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석,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논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정성평가 기준 및 배점 운영의 객관성 확보 필요함</p> <p>-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선정되었음에도 정성평가 점수 차이가 존재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 불명확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음. 항목별 해석 기준 마련, 평가자 교육, 평가 기록지 보관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함. 동일 구성 위원이 수행한 평가의 일관성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해야 함</p> <p>(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성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및 핵심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임</p> <p>- 평가자 교육, 평가기록지 보관 개선 등 포함</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6. 3월 중</p> <p>*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석,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논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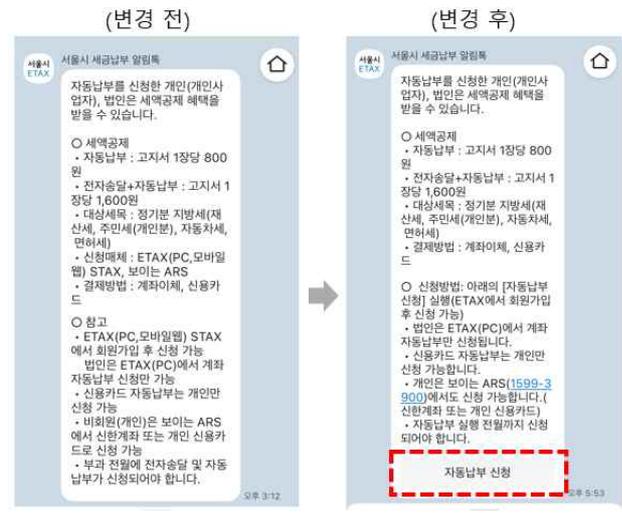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상정 및 절차 위반 재발 방지 필요함</p> <p>-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 과정에서 사업비 30% 이상 증액·부지 변경 등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됨.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절차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는 조례 및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함.</p> <p>전 부서 대상 공유재산 절차 이행 점검 및 전수조사, 사전 통제 강화가 필요함</p> <p>(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p> <p>- 점검대상 : 2015년 정기분 ~ 2025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의결된 277개 사업(327건) 중 미완료 101개 사업(114건)</p> <p>- 점검기간 : '25. 9월 ~ 10월</p> <p>- 점검방법 : 미완료사업 진행상황 전수 조사 및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관부서 및 진행상황(완료/추진중/지연) 확인·점검 • 사업 지연시 장애요인 및 향후계획 등 확인·점검 • 변경(취소)계획 수립 대상 여부 및 재상정 시기 확인·점검 <p>- 점검결과 : 완료 3건, 추진중 79건, 지연 32건(지연중 5, 보류중 1, 변경예정 15건, 취소예정 11건)</p> <p>※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사업등 변경·취소 예정 26개 사업은 관리계획(변경, 취소) 상정하도록 안내함</p> <p>○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 시의회 보고('25.11.28.)</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연사업 들은 장애요인 해소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취소 예정 사업들은 지체없이 관리계획을 재상정토록 안내하겠음</p> <p>-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상반기) : '26.3~4월</p> <p>-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하반기) : '26.9~10월</p> <p>- 이행상황 점검결과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제2차 정례회) : '26.11월</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취지가 흐려 지지 않도록 의회 정례보고와 시의원 참여 등 앞으로도 후속조치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라며, 특히 시의원 임기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회의의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추진하기 바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25.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결서 작성·보관 의무 신설 및 용어 정비, 회의자료 공개 방법 등 명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25.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정기분 관리계획부터 2025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까지 의결된 277개 사업(327건) 중 미완료 101개 사업(114건) 전수조사하여 점검 ○ 공유재산심의회 재구성('25.11.1.) 및 시의원 신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위원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시의원 4명 신규 위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잔여임기 규정 명문화 등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 '26. 6월
<p>○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관련 분담금 및 이자 전액 연내에 조속히 환수받을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2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관련 서울시에서 납부한 분담금 원금 및 이자 환수 완료(13,092백만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지방세 알림특에 자동납부 혜택은 안내되어 있으나 자동납부 방법이 없음. 자동납부 신청할 수 있는 어플 등에 연결이 필요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지방세 알림특에 [ETAX 자동납부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여 자동납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향후계획
 - '26.1월 ~ '27.3월 시민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서비스 고도화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모범납세자 제도가 단순한 영예에 머물지 않고 세대 간 납세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령 편중·이용률 저조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대별 수요에 맞춘 실질적 혜택과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취득세, 재산세 등 8년 이상 납부)에 따라 고령층이 대부분(50대 이상 : 85.2%)이나 모든 연령층의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피 할인쿠폰 등 제공 협의</p> <p><참고></p> <table border="1" data-bbox="603 748 1449 898"> <thead> <tr> <th>나이</th> <th>합계</th> <th>10대 이하</th> <th>20대</th> <th>30대</th> <th>40대</th> <th>50대</th> <th>60대</th> <th>70대</th> <th>80대</th> <th>90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인원</td> <td>322,077</td> <td>369</td> <td>943</td> <td>4,392</td> <td>42,123</td> <td>84,686</td> <td>94,017</td> <td>69,481</td> <td>23,803</td> <td>2,263</td> </tr> <tr> <td>비중</td> <td>(100)</td> <td>(0.1)</td> <td>(0.3)</td> <td>(1.3)</td> <td>(13.1)</td> <td>(26.3)</td> <td>(29.2)</td> <td>(21.6)</td> <td>(7.4)</td> <td>(0.7)</td> </tr> </tbody> </table> <p>○ 지원 혜택 이용률은 증가 추세로 2026년 모범납세자 선정 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p> <p><참고></p> <table border="1" data-bbox="603 1104 1449 1435">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 종류</th> <th>2023년</th> <th>2024년</th> <th>2025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모범납세자</td> <td>대출금리 인하(건)</td> <td>98</td> <td>221</td> <td>559</td> </tr> <tr> <td>은행 수수료 면제(천원)</td> <td>1,408</td> <td>2,519</td> <td>121,599</td> </tr> <tr> <td>신용보증평가 가점부여(건)</td> <td>3</td> <td>7</td> <td>2</td> </tr> <tr> <td>의료비 할인(명)</td> <td>20</td> <td>37</td> <td>355</td> </tr> <tr> <td>문화시설 이용 할인(건)</td> <td>-</td> <td>-</td> <td>107</td> </tr> <tr> <td>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건)</td> <td>18,552</td> <td>19,839</td> <td>22,675</td> </tr> <tr> <td rowspan="3">유공납세자</td> <td>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명)</td> <td>119</td> <td>129</td> <td>123</td> </tr> <tr> <td>세무조사 면제(건)</td> <td>67</td> <td>66</td> <td>45</td> </tr> <tr> <td>납세담보 면제(건)</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커피빈과 협약('26년 2월)으로 '26년도 모범납세자 커피 할인쿠폰 제공 및 공연 할인 확대 등 추가 발굴 지속 노력</p> <p>○ 청년·장년층 접근이 쉬운 뉴미디어 홍보 추진</p>	나이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인원	322,077	369	943	4,392	42,123	84,686	94,017	69,481	23,803	2,263	비중	(100)	(0.1)	(0.3)	(1.3)	(13.1)	(26.3)	(29.2)	(21.6)	(7.4)	(0.7)	구 분	지원 종류	2023년	2024년	2025년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건)	98	221	559	은행 수수료 면제(천원)	1,408	2,519	121,599	신용보증평가 가점부여(건)	3	7	2	의료비 할인(명)	20	37	355	문화시설 이용 할인(건)	-	-	107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건)	18,552	19,839	22,675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명)	119	129	123	세무조사 면제(건)	67	66	45	납세담보 면제(건)	-	-	-
나이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인원	322,077	369	943	4,392	42,123	84,686	94,017	69,481	23,803	2,263																																																																			
비중	(100)	(0.1)	(0.3)	(1.3)	(13.1)	(26.3)	(29.2)	(21.6)	(7.4)	(0.7)																																																																			
구 분	지원 종류	2023년	2024년	2025년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건)	98	221	559																																																																									
	은행 수수료 면제(천원)	1,408	2,519	121,599																																																																									
	신용보증평가 가점부여(건)	3	7	2																																																																									
	의료비 할인(명)	20	37	355																																																																									
	문화시설 이용 할인(건)	-	-	107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건)	18,552	19,839	22,675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신청(명)	119	129	123																																																																									
	세무조사 면제(건)	67	66	45																																																																									
	납세담보 면제(건)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업무에 관심을 갖고, 특히 과세기관 착오 환급금과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이 안되는 부분 챙길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하반기 시·구 합동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미환급금 11,260백만원 중 8,877백만원(78.8%) 정리 ○ 납세자 중심의 환급 안내 서비스 및 환급제도 운영을 통해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KT공공알림문자, 게시판, 구청 소식지 및 고지서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 통해 환급 정보 신속히 안내 - 카카오톡 및 ETAX·STAX 연계를 통한 편리한 환급신청 방법 제공 ○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개정 법령, 세목별 실무·전산 교육 등 직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직원 대상 개정세법 및 세목별 실무 워크숍 수시 실시 - 정확한 재산세·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시·구 합동 과세자료 정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합동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미수령 환급금 적극 환급 ○ 보다 다양한 안내채널 활용과 편리한 환급신청 절차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환급 발생 최소화 ○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 발생 예방을 위해 개정법령·세목별 실무 전산 시스템 중심의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가 의무화되는 만큼, 공개 기준을 체계화하고 금리·수익률 검증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금리 경쟁 심화로 사회공헌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필요
(재무과)

추진상황 : 추진 중

추진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정하는 공개 기준에 따라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26.1.8.)
('25. 12. 9. 기준, 단위 : %)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정개시일	약정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대출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금예금	기업MMDA	일시차입	지방채인수
1금고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3.1.1.	'26.12.31.	2.39	2.70	3.07	3.45	2.52	3.54	3.54	4.59
2금고	신한은행	기금	'23.1.1.	'26.12.31.	2.32	2.63	2.92	3.20	2.02	3.04	4.08	5.34

○ 은행의 사회공헌(지역사회 기여) 실적의 경우 금고지정 평가 시 다른 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변별력 확대 및 사회공헌 확대 유도
* 행안부 예규 개정('25.12.10.)사항 반영하여 조례개정 절차 진행 중

향후계획

○ 차기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 : '27. 1월 중
※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공개원칙

○ 사회공헌(지역사회 기여) 실적 관련 변경된 평가방법은 조례 개정('26.1~3월) 후 차기 시금고 평가 시 적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정부의 차등지원제 및 지방세 개편으로 서울시의 불이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영향 분석이 부족한 만큼, 실제 수혜·손실 규모를 신속히 산정하고 구조적 비용과 지역 격차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6:4) 방안 대정부 건의('25.5,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의 24.7%p를 지방소비세로 이양 (25.3% → 50%, ↑전국 29조원, 市 3.7조원) - 법인세의 30%p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이양 (10:1 구조 → 7:4 구조, ↑전국 52조원, 市 18.2조원) ○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세입 확충 강화방안 채택('2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 ○ 제도개편을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26.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장(단장),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6)으로 구성 - 월 1회이상 개최, 종합적 재정분권방안 마련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TF 논의동향을 수시로 파악·모니터링하고, 서울시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적극 전달 ○ TF 재정분권방안 도출 단계에서 신속한 서울시 재정영향 분석과 더불어, 적정한 시세 확보 및 수도권 역차별 문제 등 주요쟁점에 적극 대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금고 검사 실효성 부족 및 재검·제재 미비</p> <p>- '23~'24년 금고검사에서 총 67건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조치 '종결' 이후 재검·후속 확인 절차가 전혀 운영되지 않음. 2년 연속 제재 조치가 없는 것도 실효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됨. 시금고 검사 결과를 자료를 구축하여 반복 패턴을 관리하고, 사후 점검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p> <p>(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금고 검사('25.11.3.~11.21.)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2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23년~'25년) 지점별 누적 지적사항을 은행에 통보 -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영업점에 대한 특별교육 및 별도관리 방안 등 제출 요청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재가 필요한 중대 지적사항 없음 ○ 시금고 검사결과는 DB화하여 동일 유형 지적사항은 지속 관리 ○ 은행의 조치 결과는 '26년 시금고 검사 시 현장 확인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23년~'25년) 검사결과 조치사항 사후 확인 및 '26년 시금고 검사 시행 : '26. 10월 중
<p>○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p> <p>- 공유재산심의위원 추천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외' 라는 잘못된 해석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와의 협의 없이 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함. 이는 조례·행동강령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됨. 향후 위원 추천 시 소관 상임위 협의 및 적법한 회피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함</p> <p>(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위촉('25.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 각 1명 위촉 ○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추가 위촉('25.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위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재무국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위촉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위원 추천 관련 내부 의사 결정 및 소통 절차 정비 필요</p> <p>- 위원 추천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되어 오해와 절차 논란이 발생함. 향후 상임위와의 협의-의장 승인-추천 통보의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재발을 방지해야 함</p> <p>(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위촉('25.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 각 1명 위촉 ○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추가 위촉('25.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위촉 <p>※ 의회 운영지원과에 시의원 추천 요청시 원활한 위촉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안내 공문 발송('25.11.24.)</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재무국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위촉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시의회(운영지원과)에 의원 추천 요청 →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사전 협의 → 의장 승인 → 시의회 추천 통보 → 위촉
<p>○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 과제 평가조작, 표절,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내부 부조리가 반복된 만큼, 서울시가 최대 출연기관으로서 선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혁신TF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24. 12. 20.~'25. 3. 12.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선임이사 정수 확대(광역4, 기초4→광역8, 기초8) - 이사회 임기 확대(1년→2년) 및 매년 순차 교체(매년50%) ※ '26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市는 2년 주기로 이사회 참여 가능 ○ 출연금 부담액이 많은 서울, 경기의 이사회 배석('25.12.1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사회 정수 확대) 예정 ○ 매회 이사회 참석으로 연구원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개선 도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연구원 내 비정상적 조직 문화와 인권 침해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외부 발표나 조치가 미흡했던 만큼, 서울시는 관련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과장-연구원장 면담('2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등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요청 ○ '25년 제10차 이사회 배석('2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 파악 ○ '26년 제1차 이사회 배석('26.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근로감독 후속조치 결과 파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 매회 참석 및 연구원 운영 개선 건의
<p>○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퇴직 공무원의 '경유지' 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인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부과·징수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 다만, 지방세연구원 등 유사 연구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취업시 별도의 취업심사는 필요없음 ○ 서울시 퇴직공무원 중 지방세연구원에 취업한 사람은 있으나, 지방세연구원 취업 후 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한 사례는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만큼, 재무국은 파견 인력과 소통 채널을 통해 감독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받고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완료('25. 11. 25.)
<p>○ 올해 3월 연구원이 발표한 조직혁신 비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실행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혁신분야 15개 혁신과제 중 9개 완료, 6개 진행 중 (완료율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질적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강화분야 혁신과제(4) 완결 - 성과평가제도 재설계 통한 조직성과 제고분야 혁신과제(2) 완결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분야 혁신과제(3) 중 1개 완결 -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 분야 혁신과제(2) 중 1개 완결 - 책임경영체계 확립분야 혁신과제(4) 중 1개 완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혁신과제 실행 현황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감독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교육원 건립 명목으로 잉여금을 장기간 방치한 문제를 고려해, 사업 중단 이후 대안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발전기금 운영안」 개정('25년 제1차 이사회, '2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용도: 지방세교육 시설확보→이사회결로 사용 - 적립목표액: 50억원→적립목표액 미설정 ○ 세제과장-연구원장 면담('2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활용방안 수립 등 연구원 운영 개선 요청 ○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심의회 참석('25.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사용계획 수립 건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의 기금사용계획 수립 및 실행 현황 관리·감독 지속 추진
<p>○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전혀 차단되지 않은 채 편의·관행적 계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강제적·전면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를 전자공개수의 의무발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이 확인된 계약 분야에 대해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발주 확대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시 소관 상임위 의원 배제 방침에 대하여 ▲왜 상위법 위반·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외부 심의위원 풀 구성 과정의 폐쇄성 문제를 점검해 위원 추천 구조와 풀 구성 절차 전면 재정비 ▲타 시·도 및 다른 상임위의 심의 참여 관행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해 의원 참여 허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법률 자문과 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상위법 위반 없이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시금고 선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풀 구성 개선(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심의위원 추천 분야·기관 재구성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26년 3월중) 시 논의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6.4월~5월 중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복수금고제 취지에 맞는 운영기준 정비 필요함</p> <p>- 현행 체계에서는 1·2금고 모두 동일 은행이 지정돼 복수금고제의 경쟁·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 금리·서비스 비교기능 강화를 위해 동일은행의 중복 수입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계 특성별 차등평가 방식 검토 등이 필요함.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또는 심사기준 개편이 요구됨</p> <p>(재무과)</p>	<p>□ 추진상황 : 검토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금고제 시행 개선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은행 중복 수입 제한에 따른 금리, 서비스 등 장단점 분석 - 1·2금고 특성에 맞는 평가 및 선정 방안 등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복수금고제 시행방안 포함) : '26.3월~4월 중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금고 지점 축소에 따른 시민편의 영향 분석 필요함</p> <p>- 신한은행 영업점 축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취약 계층 방문 불편,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담 증가가 우려됨. 금고 지정 시 지점수·ATM 접근성 등을 정성평가 요소로 강화하고, 향후 금고 운영점포 변동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포함할 필요 있음</p> <p>(재무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p>○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점수·무인점포·ATM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p> <p>- 향후 무인점포·ATM 등 운영 방안 등 평가 포함 등 검토</p> <p>□ 향후계획</p> <p>○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6. 3월 중</p> <p>*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석,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논의</p>
<p>○ 차기 시금고 선정 관련하여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없이 공정한 진행이 필요</p> <p>(재무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향후계획</p> <p>○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추진</p> <p>⇒ '26년 상반기</p>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간의 적합성을 재점검하고 기준·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 심의회 개최 전날 경찰관 입회 하에 위촉 순서 추천 등 절차로 공정성 확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6.4월~5월 중
<p>○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안 모색이 필요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6.4월~5월 중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금고 검사결과의 평가 연계 필요</p> <p>- 지적사항이 반복되며 검사·개선 구조가 형식화되고 있어 금고 재지정 평가와 연동하는 체계가 필요함. 지적유형·빈도·조치이행 등을 정량화하여 금고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반복 지적 시 감점·조건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p> <p>(재무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p>○ 시금고 검사결과는 DB화하여 동일유형 지적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음</p> <p>- 최근 3년('23년~'25년) 지점별 누적 지적사항을 은행에 통보</p> <p>-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영업점에 대한 특별교육 및 별도관리 방안 등 제출 요청</p> <p>○ 지적 유형별 금융기관의 대응 및 금고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기준 개선을 검토하겠음</p> <p>□ 향후계획</p> <p>○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6. 3월 중</p> <p>*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석,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논의</p> <p>○ 최근 3년('23년~'25년) 검사결과 조치사항 확인 및 '26년 시금고 검사 시행 : '26. 10월 중</p>
<p>○ 과세전 적부심 급증 사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p> <p>-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과세 기준 불명확으로 '24년에 적부심이 폭증함. 표준안 이전 단계에서 지침 부재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발생함.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 사전 안내·컨설팅·지침 조기 마련을 통해 불복 누적을 방지해야 함.</p> <p>(세무과)</p>	<p>□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 추진내용</p> <p>○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상당액 취득세 과세 추진계획 수립('23.10.18.)</p> <p>- 프리미엄 과세에 관한 행안부 질의회신 통보('23.8.22.)</p> <p>- 은평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과세(8,087건) 및 과세예고 진행 중</p> <p>※ '25. 12월 말 현재 불복 청구는 과세전적부심 825건, 이의신청 123건, 심판청구 445건, 행정소송 5건</p> <p>- 행안부 유권해석 이후 승계조합원 관련 자치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안내하여 이견 없이 신고납부 중임</p> <p>○ 재개발 관련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2회)</p> <p>- 일시 : (1차) '25. 11. 3~ 4. / (2차) '25. 12. 15.</p> <p>- 내용 : 재개발 관련 직무교육 및 관련 토론</p> <p>□ 향후계획</p> <p>○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안부 및 자치구와 협업 구축</p>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연구원이 기부금·출연금 구조 속에서 사실상 행안부가 관리하는 이중 구조가 조직 관리 부실을 초래한 만큼, 서울시가 정책 건의 등 적극적 개선 역할을 수행할 것 (세제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혁신TF 참여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24. 12. 20.~'25. 3. 12.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선임이사 정수 확대(광역4, 기초4→광역8, 기초8) - 이사회 임기 확대(1년→2년) 및 매년 순차 교체(매년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市는 2년 주기로 이사회 참여 가능 ○ 세제과장-연구원장 면담('2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등 연구원 운영 개선 요청 ○ '25년 제10차 이사회 배석('2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 파악 ○ '26년 제1차 이사회 배석('26.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근로감독 후속조치 결과 파악 등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사회 정수 확대) 예정 ○ 市, 지방세연구원 이사회 매회 참석을 통한 의견 개선
<p>○ 연구원의 누적 잉여금이 100억 원 이상 쌓여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잉여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제출하고 필요 시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세제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지자체 출연금 감소에 따라 누적 잉여금 일부를 '26년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업수행 예정('25년 제6차 이사회, '25.8.29.) ○ 세제과장-연구원장 면담('2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 축소방안 수립 등 연구원 운영 개선 요청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잉여금 사용계획 별도수립 예정(지방세연구원)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지방세연구원 문제를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국가적 의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세제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과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시도협, 시군구협 출연방식 개선 등 협의('23.7월) ○ 시도지사협의회에 출연비율 폐지 건의('23.8월) ○ 중앙-지방협의회에 출연비율 폐지 건의('23.12월)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출연비율 폐지 조정신청('24.9월) ○ 전국 세정과장회의에 이사회 운영개선 건의('25.11월)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현안의 심각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타시도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건의 추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별 주관부서가 각각 달라 안내 내용이 제각각일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국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환급(상계) 방식 등 감면 처리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 부서에 통일된 내용으로 안내·관리할 것. 아울러 임대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약 203억 원 규모의 세입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정 보전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재산관리과)</p>	<p>□ 추진상황 : 추진 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수립 ('25.9.22.) ○ 『임대료 감면기준』 공유재산심의회 상정('25.9.25.) ○ 공유재산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시행 안내 ('25.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과 방침서에 첨부한 안내문, 감면기준, 감면서식 등을 참고하여 각 재산관리관 또는 위탁기관별로 상인회 및 임차인에게 직접 안내하였으며, 게시판 공고 등을 병행 추진함 ○ 재산관리관별 감면에 따른 환급 또는 상계조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산관리관별 감면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계획과 소관 주차장 및 부대시설 345개소 26억원 ▸ 농수산유통과 소관 마포 농수산물시장 점포 80개소 3.4억원 ▸ 서울대공원 소관 매점 및 식당 12개소 2.4억원 ▸ 미래한강본부 소관 한강 매점 14개소 2.4억원 등 <p>※ 도로시설과 소관 지하도 상가(2,788개소)에 대해서는 '25.12~'26.2월 접수중</p>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26년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 고시('26.1.1.)에 따라 『'26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을 2분기 중 수립하여 추진 예정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차기 금고 선정 과정은 재무국만의 사안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체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잡음 없는 금고 선정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음. 그럼에도, 금번 감사 과정에서 재무국의 답변 내용과 제출 자료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였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요구자료 제출 완료 ('25.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선정 이후 신한은행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위원별 정성평가 항목 평가결과 - 금융기관 제안서(시금고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으로 같음)
<p>○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위촉 현황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25. 11. 12.)
<p>○ 기존 업무보고 내용에서 업데이트만 하는 관행 탈피. 매출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과 같이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할 현안 사항이 부서 업무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쓸 것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및 안내 자료 별도 제출('25. 11. 11.) ○ 향후에는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충실한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별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사업 안내 자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자료 제출 완료('25. 11. 11.)</p>